다산포럼

김정남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하라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가 쓴 산문 가운데 미당(未堂) 서정주와 얽힌 사연이 나온다. 문학지의 주간으로 있던 조정래는 1985년 8월호에서 광복 40주년 기념특집으로 친일문인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친일문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죄를 한 바 없었으므로, 차제에 사죄를 하게 하자는 것이 그 특집의 큰 방향이었다.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도록 지면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생존자 중에서 문학적 비중으로 보아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서정주였다. 서정주는 대학시절 조정래의 선생님이었고, 그의 아내를 시인으로 등단시킨 스승이었으며, 그들 결혼식의 주례였다. 조정래는 아내와 상의 끝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서정주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선생님께서 글의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선생님은 자유로워지십니다." 조정래가 조심조심 꺼낸 말이었다. "뭐라고! 넌 대학생 때부터 반골기질이 승하더니만…. 그래 들어봐라." 안색이 변한 서정주는 두 시간이 넘도록 장광설을 폈다. 그러나 결국 서정주는 글쓰기를 거부했다.

서정주는 끝내 자신의 친일행각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가 마이크를 대며 물었다. 친일에 대해 말해 달라고. "거 뭐 잘들 봐달라고 해!" 초췌한 서정주의 대꾸였다. 조정래는 그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쓰라렸다. 그의 선생님은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미당은 그야말로 미당인 채로 이 세상을 떠났다.

사과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던가. 아니면 친일이 그의 신념이었던가. 세상을 잘못 본 안목과 민족을 배신한 한 때의 잘못을 사과하면 될 일이었다. 그는 끝내 한 마디 사죄의 말을 후련히 뱉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나는 조정래의 그 글을 보면서, 서정주가 시는 잘 쓰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못나고 용렬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1980년대 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때 전두환 지지연설을 하는 서정주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나 할까 의심했다.

조정래의 그 글에 의하면, 일본의 압제로 죽어간 우리 동포들의 숫자가 400여만, 반도의 조선땅에 들어와 활개친 일본인 수가 80여만, 거기에 기생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160여만 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99%가 지식인이었다. "새와 짐승도 갯가에서 슬피 우는데 / 무궁화 나라는 이미 사라졌는가 /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옛일 생각하니 / 글 아는 사람 구실 참으로 어렵도다"라는 절명시를 남기고 순국한 황매천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갔던 지식인 160여만 명 가운데 민족 앞에 진솔한 사죄의 말을 남긴 이가 있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이 친일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 이육사(李陸史)는 열 차례도 넘게 투옥당한 끝에 세상을 떠났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던 윤동주는 일본감옥에서 생체실험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친일한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사죄도 하지 않는데, 용서부터 하라고? 그들의 친일을 부득이한 일로 이해하자고? 역사가 개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다 들어준다면 이 세상에 정의란 없다. 친일보다 그의 공적이 크다고? 그건 역사가 평가할 일이다. 그들에게 나는 제발 부끄러움을 알라고 말하고 싶다.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친일인사 4천389명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담은 인명사전을 발간한다고 한다. 그 발간이 임박해지자 여기저기서 발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동병상련인가. 자신들의 뒤가 구려서인가. 있었던 사실을 있었던 대로 밝히는 것이 왜 그렇게도 두려운가. 그들은 구한말 나라가 망할 때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썼던 장지연 같은 애국지사를 친일인사로 몰아서야 되겠느냐고 항변한다. 나도 장지연의 훼절을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또 애석해마지 않는다. 나는 그가 관여했던 '경남일보'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걸 어쩌랴. 조지훈도 지조론에서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을 보려면 다만 그 후반을 보라 하였으니 참 명언이다"하였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놓고 볼 때, 이 나라에는 민족, 민주, 통일을 지향해 온 한 축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을 지향하는 또 하나의 축이 엄존하고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세력은 당연히 반민주의 편에 섰던 사람과 궤적을 같이한다.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며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정치인, 관료, 검사·판사 등 법조인, 독재를 엄호하고 용비어천가를 썼던 언론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나는 언젠가는 '반민주 인명사전'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거기 정의가 살아 숨 쉬고 민족정기가 바로 선 당당한 대한민국이 된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세종시 '지방기업 블랙 홀' 안돼야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대기업 유치와 함께 22개 교육기관이 이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이 세종시에 제 2캠퍼스를 만들고 우수 고교도 유형별로 1개씩 우선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지방균형 발전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세종시가 지방의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 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 입주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파격적이다. 원가를 밑도는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국무총리가 직접 세일즈에 나선데다 다양한 당근이 뒤따르니 기업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세종시 여파로 지방의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벌써부터 지방으로 오기로 한 기업들이 세종시로 발길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의 '세종시 입주설'에 지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역시 '세종시 빨대 효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과 대학을 끌어 모아 일단 숫자나 채워 놓고 보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세종시를 어떤 성격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 개념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다.

공장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기업의 특성에도 맞지 않은 지역에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은 국제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세종시를 살리기 위해 지방을 죽인다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은행 손실부담 가계에 덤터기 씌우다니

가계대출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차이인 가계대출가산금리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금리와 저축성예금금리의 예대마진도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대출은 저금리를 적용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결과이다. 금융위기의 책임을 따지자면, 은행과 부실 경영을 한 일부 기업의 책임이 더 큰데 애꿎은 가계가 덤터기를 쓴 것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는 올해 1~9월 평균 3.07%포인트로 지난해의 1.59%포인트보다 무려 1.48%포인트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는 3.0%포인트를 기록, 지난해보다 1.2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가계보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가산금리 일부가 가계대출로 전가된 셈이다. 은행이 개인인 가계금융소비자를 '봉'으로 여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가계대출금리에 높은 가산금리를 매기고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경영행태는 관행처럼 굳어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이 같은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의 대부분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수익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자고 마음만 먹으면 대출 가산금리 조정으로 얼마든지 손쉽게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도 된다. 한마디로 가계는 은행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가계대출금리의 왜곡은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은행의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높은 가계대출금리가 은행 간 금리 담합에 의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양곤

스무살 청년이 된 보호관찰

『B(29)씨는 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예전의 못된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채 다방 종업원인 A(25)양을 건물 옥상으로 유인, 위협하여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경찰에 용의자로 붙잡힌 B씨는 "범행시간에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고 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추적한 B씨의 전자감독 위치 정보를 보여주자 범행일체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출소하면서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보호관찰소 관제센터에는 B씨의 범행시간 전후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 전자발찌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된 성폭력범 B씨의 실제 사건 사례이다. 전자감시제도(일명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 범죄를 예방하거나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국민들이 아직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도 올해로 벌써 20년이 되었다.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든 것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18개 보호관찰소, 140여 명에 불과하던 직원은 현재 54개 보호관찰소에 약 1천200여 명으로 늘었다. 내년에 장흥 등 3개 지역에 사무소가 신설되면 전국의 모든 법원·검찰에 대응하여 보호관찰소가 설치되게 된다.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보호관찰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업무영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소년범에 국한되었으나,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은 성인범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가정폭력사범, 성매매 사범 등으로 그 대상을 넓혀왔고 이제는 거의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보호관찰이 있기까지에는 개청 초기 황무지와 같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도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범죄예방위원들을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이 보내준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크다 하겠다.

보호관찰은 범법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도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질책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노력해 온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보호관찰 구성원들은 제도가 성년이 된 만큼 이에 상응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장〉

기고

장용주

재해, 예방이 최선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17명의 사망·실종자와 1조97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재난분야는 국가 정책의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투자가 저조하게 이루어졌다. 예방보다는 피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활용한 사후 복구위주의 대책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에 따르면 1달러를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면 3.6달러의 재해예방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그만큼 예방투자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국가예산의 2.95%를 재해예방 사업에 투자하고 사후복구비를 포함한 전체 방재예산의 약 74%를 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 중 1.68%만이 방재분야 예산이고, 전체 방재예산의 48%만이 재해예방 사업에 쓰이고 있다.

'예방'이 곧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설마 하는 순간 사고는 어느새 다가온다. 사고 난 뒤에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 개인뿐 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부터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는 없는지 가정과 직장의 안전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지고 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보고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각종 대형 사고의 원인은 하드웨어의 문제보다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더 많다.

여기서 하드웨어의 문제라 함은 방재시설의 확충을 말하고,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 즉, 방재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민 안전교육이다. 평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 방재시설 투자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인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가 시급한 과제다. 먼저 재난안전 관련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소양교육은 학교와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교육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기관과 대상에 따른 종합적·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시민안전체험관을 비롯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다.

재해예방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며, 안전한 미래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 남부소방서장〉

無等鼓

비자(visa)

외국여행을 갈 때는 여권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방문국이 요구하는 비자(visa)다. 사증(査證)이라고도 불리는 비자는 한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이다.

사증은 일반적으로 출발국에서 가려고 하는 나라의 영사관으로부터 받는다. 일부 국가는 자신의 나라 밖에서 사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자는 사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다. 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자제도가 태동한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대방의 스파이가 잠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의 신분과 목적을 미리 파악해 허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평시에도 이민, 유학, 일자리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이민이나 국내 고용질서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때는 엄격한 사증제도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관광객이 30일 동안 무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사람들에 한해서다.

중국은 지난해만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4천5백여만 명이 해외여행을 한 여행 대국.

2010년부터 3년간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한 우리로선 가장 놓치기 어려운 손님들이다. 반면 비자가 면제되면 입국도 그만큼 쉬워져 불법체류가 늘어날 수도 커진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공무원 등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우려도 있겠지만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교류확대를 위해 좋은 일이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아파트 샤워실 유리는 꼭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얼마 전 동생 집들이를 갔다가 조그만 사고를 겪었다. 사람의 키만한 커다란 유리가 내가 샤워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뻥 소리와 함께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튀었다. 문제는 이 유리가 자동차에 쓰이는 안전유리가 아니라 일반 일반유리라는 점이었다.

자동차에 쓰이는 안전유리는 깨지는 순간 조그만 구슬처럼 잘게 부스러지면서 날카롭게 날이 서는 일이 없다.

업자들이 안전유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가격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싸구려 일반 유리를 쓰도록 하면 안 될 것이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샤워실 유리는 꼭 안전유리를 쓰도록 하고, 그게 안되면 아예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운2동

심각한 조합장선거 부패상, 유권자가 달라져야

얼마 전 광주일보에서 '긴급진단-돈 선거 온상 조합장' 제하에 4회에 걸쳐 특집으로 엮은 조합장선거의 실태와 대책을 다룬 기사를 읽었다.

특집기사를 보고 조합장의 권한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막강하고 조합장선거의 혼탁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한데 대해 놀랐다.

특집기사에서 보여준 문제점 등이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고서는 조합의 밝은 미래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조합장선거의 유권자 대부분이 겹치는 내년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란 점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된 선거운동방법 등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유권자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유권자가 후보자가 주는 검은 돈을 돌 같이 대할 때만이 돈 선거풍토는 사라질 것이다.

▲권병주·장흥군 장흥읍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